

尹 “의대 증원 2000명 대학별 배정, 필수 의료 기반 마련”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 “의료인들 대화 적극 나서주길” 당정 관계자들, 협의체 제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에게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정 관계자들이 나서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대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있어서도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첫머리에서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26일 의료계와 만나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을 논의하고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대표단,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한 뒤 성남시 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의료계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법으로 논의한 중재안 3가지를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의정 협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내 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0명 의대 증원 정부안을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다음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자”며 “이같이 과학적 추계를 내는데 약 3-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합의 후 나중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세번째 중재안으로는 “현 상태로 한 달 이상 의료 파업(의정 갈등)이 지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라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건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6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될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과학기술원 의생명연구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성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이 자리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과 환자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정세균·임종석, 총선 유세 지원 출격

정, 종로에서 시작해 전국 순회 임, 한강·낙동강벨트 중점 지원

더불어민주당 공천 내홍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 유세전에 출격한다.

두 사람 모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직책은 맡지 않고 외곽 지원을 통해 당의 총선 승리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로인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안방’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광삼

언 변호사가 출마한 서울 종로에서부터 전국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정 전 총리는 공천 내홍이 극심하던 지난달 2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에게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이후 당 선대위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반면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합류하지 않았으나 당 원로인 만큼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옛 SK(정세균)계 등 인연이 있는 인사의 출마지나 격전지 등 전국을 돌며 표심 호소에 나선다.

중·성동갑에 출마하려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뒤 선대위 출범쯤 ‘백의중군’을 선언한 임 전 실장 역시 28일 선거 지원에 나선다.

임 전 실장의 출격을 두고선 추후 당내에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임 전 실장도 백의중군 선언 취지에 맞게 별도의 직책 없이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와 ‘낙동강 벨트’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경북과 강원 등 협치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이미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다. 28일 서울에서부터 유세를 시작할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첫 선대위 회의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민주주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선 “평범한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김건 공동선대본부장도 당 후보들에 대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일로서 증명된 사람들”이라며 “한풀이를 위해 모이거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 본부장은 비례대표 후보 6번이다.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역임한 강선영 공동선대

본부장(5번)은 “총선에 출사표를 낸 정치지망생 일부는 다수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며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군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북한 정권의 거짓된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자들로부터 국민과 안보를 지키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민전 공동선대본부장(9번)은 “2024년 총선은 구속돼야 마땅한 피고인들이 복수혈전을 하겠다고 외치는 총선”이라며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부패 근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미래 의석 목표에 대해 “지난번(19개)보다 훨씬 더”라며 “육심 같아선 40개 다 차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은 총선용 기획 입국”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은 총선용 ‘기획 입국’이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이종섭 도주대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정부는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를 내놓거나 앞두고 이 대사를 입국시켰다. 보통 대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가관인 것은 출국일이 언제인지도 미정이다. 아마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호주로 복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는 총선 악영향이 우려되자 정부가 이 대사를 ‘기획 귀국’ 시킨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얼마나 더 망칠 작정인가. 이 대사 임명은 현 정부의 슬한 외교참사들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사를 도주시키기 위해 전임 김관중 대사를 1년 3개월 만에 불러들여 놓고 외교부는 김 대사의 정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거짓말

이다. 외교공무원법 제27조 등에 따르면 64세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사 재직기간은 최소 2년”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의 수사 빌드업 후에 소환하겠다는 공수처를 정치질이라 비난하면서 이 대사와 달리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는 출국금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러나 송 전 대표의 건은 출국금지 안 한 게 아니라 외국에 있어서 못 한 것이다. 귀국하자마자 출국금지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치가 여의도에서 나와 국민속으로 출근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곳
국민이 기쁨을 누리는 곳
국민이 좌절을 경험하는 곳
국민이 희망을 꿈꾸는 곳
그 모든 곳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아침과 저녁이
보다 나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국민과 만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이신용은 '공직선거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